

우유만큼은 자급한다는 낙농철학 가진 대통령이 나오길 고대하며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정치의 계절이다. 올 해는 지난 4월 총선이 있었고, 연말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온갖 공약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 농축산업을 위한다는 공약들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에서 가만있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구호성 공약만이 난무할 우려가 매우 높다. 협회는 축산부문 공통의 과제로 3대 축산정책비전과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범 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무허가축사 양성과 특별조치를 비롯하여 FTA 피해보전대책, 사료안정기금 설치,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허용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선진 낙농국가들과의 연이은 FTA 체결과 협정추진으로 향후 수입유제품의 범람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사료값 문제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점차 폭등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환경문제는 목장경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전국 6천호 남짓한 목장에서 우리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신선우유 생산기반이 언제까지 지켜지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어느 후보가 진정 우리 낙농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우유의 가치와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활동만큼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대다수 선진국가의 낙농철학이다. 지금껏 정부는 원유수급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낙농철학의 부재속에 낙농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농정불신을 키워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해 극한상황까지 내몰렸던 원유가현실화 문제는 우리 낙농산업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 현상이었다. 우유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잉여를 안고 가야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낙농정책의 기초는 첫째도 생산자대책이어야

하고 둘째도 생산자대책이어야 한다. 연말 대선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보다 좋은 여건 속에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낙농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0. 23일 이사회에서 낙농육우산업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낙농부문 5대 핵심과제로는 전국단위 우수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과 FTA 낙농가 피해보전 대책,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유지, 육우가격 안정화 대책, 대북 어린이 우유 지원방안이다.

우선 낙농제도와 FTA 낙농 피해보전 대책 문제다. 낙농산업은 생산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태생적 한계로 전국적인 수급조절 실패 이후 지난 2004년부터 낙농제도개편 문제가 논의되어 왔으나 이해주체간 이견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도 정부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내놓고 개편 문제를 논의 중에 있지만 이 또한 담보상태다. 누구나 알다시피 FTA 하에서 점차 국내 유제품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생산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원유생산주체인 생산자와 수요자인 유업체간의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대책안은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의 불합리한 집유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낙농제도개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체제 속에서는 생산자는 계속해서 생산자유통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FTA 체제하에서 농가의 거래교섭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 명확하다. 낙농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과 이를 통해 생산자의 생산자유통권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 우유자급율에 대한 명확한 목표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쿼터 보장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FTA에 따른 낙농가 피해보전대책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피해보전직불제도로는 낙농부문의 피해를 산출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낙농의 경우 원유가격은 단순 시장논리가 아닌 생산비에 기초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농부문 FTA피해는 가격하락 기준이 아닌 생산량(쿼터감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낙농의 특성을 감안하여 생산량 기준인

“낙농의 특성을 감안, 생산량 기준인 쿼터감축에 대한 피해 보전이 가능토록 피해보전직불금의 기준을 개선해야”

쿼터삭감에 대한 피해 보전이 가능토록 피해보전직불금의 기준을 개선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다.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과 일반학생에 대한 유상급식으로 병행 실시 중에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 별로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우유 급식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50%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92.9%로 현재 우리의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해법이 학교우유급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국민영양조사에서 청소년의 칼슘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66.3%, 중·고등학교 89.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일반급식과 우유급식의 제도적인 통합방안 마련은 청소년의 균형된 영양섭취와 낙농생산기반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급식을 포함하는 통합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매년 학교우유급식 공급수량을 공표하고, 농식품부와 교과부 통합의 '학교우유급식 지침'을 설정하여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도입과 연계하여 우유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군급식, 전의경급식도 성인 1일 우유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유급식 확대와 실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은 낙농과 불가분의 관계인 육우대책이다. 육우가격 안정화는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산육우는 가격측면에서 수입육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국내쇠고기시장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낙농업의 산물인 수송아지는 필연적이다. 울초 육우값, 송아지값 폭락으로 육우군납물량이 확대되어 그나마 가격폭락을 막고 있지만, 육우고기 유통관로 확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가 절실하다. 육우전문판매장 개설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육우 판매경로 확보가 중요하고, 현행 육우 군급식 공급물량(18g/1일 1인)의 유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다. 현 MB정부 출범 당시 공약집에는 대북어린이 우유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악화로 인

해 접근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우유, 분유지원이 이뤄지고는 있다. 북한 어린이의 고른성장이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후 사회적 비용 절감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경제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학생들의 신장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은 보다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어린이의 영양개선에 우유는 매우 중요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낙농부문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유는 남아서 남는 게 아니다. 우유자급률은 계속적으로 하락해 60%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결국 수입유제품의 범람이 우유를 남게 만드는 원인이다. 우유가 남는다면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생산을 줄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안과 국내유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 생산자들은 피해보전직불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낙농생산기반 유지와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낙농산업은 올바른 제도들 속에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조사료문제, 환경문제, 치즈로 대표되는 국내유제품시장 형성을 위한 대책들 모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우유는 제2의 식량이다.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이 쌀 다음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유는 이제 소비량기준으로 쌀을 넘어 1위를 넘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식품이다. 그러나 현재 6천호 낙농가들이 우리의 우유생산을 책임지고 있지만 개방화 파고 속에 낙농정책의 실기는 낙농산업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물고 갈 우려가 크다. 왜 선진국들은 우유공급의 원활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직간접적인 국경보호 조치와 가격지지를 통해 낙농업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우유만큼은 자급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공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선주자를 기대하며, 우유의 올바른 가치를 알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

“우리 생산자들은 피해보전직불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낙농생산기반 유지와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